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석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신체제기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다 미

# 유신체제기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홍석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다 미

# 인 준 서

김다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이 논문에서는 비민주적인 통치 아래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전반을 규율했던 유신체제기에 왜 문예중흥정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신전후 박정희 정권의 문예중흥정책의 추진과정과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문예중흥정책은 1971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71년 대선은 김대중의 등장과 그에 대한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지지로 인해 박정희에게 집권연장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선거였다. 박정희는 문예중흥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지향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후 문공부를 중심으로 문예중흥정책이 성안되었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과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 10월 19일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계획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전체 퍼센트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전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반 문화예술과 대중문화에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인의 반(反)박정희 성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지식인들은 유신체제성립에 동원되기도 했으나, 또 다른 지식인들은 반유신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 중 문인들은 지식인 반유신활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박정희 정권에게 지식인에 대한 통제의 범주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결국 유신체제기에 추진된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은 박정희 정권이 문예중흥정책을 통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일면 끌어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동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통제·동원’ 방식을 선택한 것은 당

시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들이 친유신체제적이었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와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던 문화예술계의 지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재원은 국민에게 ‘준조세’ 형식으로 모금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선별적 육성과 배제’의 방식으로 ‘통제·동원’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은 지원을 매개로 하는 박정희 정권의 ‘통제·동원’ 방식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선별적 육성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1975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에 대한 지원철회를 통해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은 친유신체제와 반유신체제의 명확한 기준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 2단계는 1977년에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예산증액과 이에 따른 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지원방식의 변화는 원고료 지원 문예지와 미지원 문예지간의 원고료 격차를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원고료를 지원받는 기득권 문예지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여타의 문예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문예지 시장구조가 만들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시장질서의 논리와 국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통제 논리를 결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통제·동원’한 것이다. 이로써 반유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문예지조차 문예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문예지에 대해 ‘배제’와 ‘포섭’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고, 원고료 미지원 문예지들은 지원여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통제·동원’ 방식이 유신체제가 문예진흥정책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머리말 .....	1
II. 문예중흥정책과 문예진흥기금 .....	5
1) 지식인의 반정부적인 성향과 박정희 정권의 대응 .....	5
2) 문예진흥법의 제정과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추진 .....	10
3)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 그 성격 .....	21
III.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실상 .....	28
1)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추이 .....	28
2)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에 대한 지원철회 .....	35
3) 1977년 문예지 원고료 지원방식의 변화 .....	40
IV. 맺음말 .....	46
참고문헌 .....	51
Abstract .....	56

## 표 목 차

<표1> 1971년 대통령 선거 직업별 후보자 지지성향 .....	8
<표2> 1971년 대통령 선거 소득별 후보자 지지성향 .....	8
<표3>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재원별 투자실적 .....	17
<표4>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부문별 투자실적 .....	18
<표5>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 중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	26
<표6> 문예진흥기금 부문별 투자 실적(1974~1978) .....	26
<표7>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 중 문예지 원고료 지원 실태 .....	31
<표8> 잡지사 자체부담액과 지원금 간 원고료 분담금액 .....	41

## I. 머리말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였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했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했다. 그런데 유신체제기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국가차원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기에 문화예술인들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예중흥정책을 통해 지원해주기도 한 것이다. 이 논문은 비민주적인 통치가 가장 노골화되었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전반을 규율했던 유신체제기에 왜 문화예술분야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예중흥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는 유신체제기 문예중흥정책의 성립과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기 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족주의 비판론’ 차원에서 당시 정부의 민족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1)</sup> 이들 연구는 박정희 정권이 문화재의 발굴과 복원을 통해 정권의 이해에 맞는 민족주의적 상징을 만들고자 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족주의 비판론’

---

1)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오명석, 「1960~70년대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4,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7,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전통의 선별과 창조」, 『전통과 현대』22, 전통과 현대사, 2002;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15,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은정태, 「박정희 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15, 역사문제연구소, 2005; 공제욱, 「일상공간 속의 애국주의」,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 2008.

적 시각의 연구들은 박정희 정권이 민족문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기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또 민족문화정책은 박정희 정권기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은 유신체제기에 문예중흥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적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한편 박정희 정권기 문화정책을 ‘문화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한 연구들도 있다.<sup>2)</sup> 이들 연구는 박정희 정권기 문화행정기구의 변천과 그 효율성만 분석할 뿐 당시 문화정책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는 주목하지 않는다.

유신체제기에 국한하여 문화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주장현의 연구<sup>3)</sup>가 있다. 이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제의 매개인 문예진흥기금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유신체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운동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의가 시론적(試論的)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선별적 지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던 문화예술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때문에 기금의 수혜자인 개별 문화예술인들의 반응도 함께 분석해야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문예진흥

2) 조현수, 「70년대 한국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1974-1978)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송명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김문조·박수호, 「한국문화정책: 회고와 전망」, 『아세아연구』10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하효숙, 「1970년대 문화정책을 통해 본 근대성의 의미-문예중흥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 주장현, 「반유신과 문화예술운동」, 안병욱 외 지음,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신체제기 문예진흥정책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제·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당시 박정희 정권이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통제·동원’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양상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때문에 그 집행과정은 문학분야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당시 문인들 사이에는 유신체제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뚜렷하게 분할되어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신체제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통제·동원’의 양상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신체제기에 이전시기 찾아볼 수 없었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통제·동원’방식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지식인 정책을 해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지식인이며, 이들의 창작활동은 지식인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제·동원’방식은 박정희 정권의 지식인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서 발간된 『문예진흥원20년사』와 그 기관지인 『문예진흥』이다. 이 자료는 문예진흥원 주관의 사업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참

고하였다. 둘째, 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 문화국 진흥과 소관의 문서 중 제 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과 관련된 문서철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문예진흥원 발간 자료집에서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셋째, 각종 일간지로 논문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하였다. 넷째, 당시 활동한 문인들의 증언과 문인들간의 대담(對談)을 다룬 저작들이다. 이 저작들은 역사학적 범주의 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당시의 문단지형과 문예지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 II. 문예진흥정책과 문예진흥기금

### 1) 지식인의 반정부적인 성향과 박정희 정권의 대응

1968년은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가 중첩되는 시기였다. 연초부터 1·21사태가 터졌고, 이틀 뒤엔 푸에블로호가 납치되었으며, 연말에는 북한이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 게릴라를 남파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향토예비군, 주민등록증제 등을 실시하고, 사상·문화적 통제를 강화했다.<sup>4)</sup>

당시 박정희는 사상·문화적 통제를 위하여 ‘제2경제론’을 제창했다. 제2경제론은 1968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年頭巡視)를 통해 처음 피력되었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에는 경제건설과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성장이 병행되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사물에 대해 긍정적이고 선의적인 관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 제2경제의 요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문화 등 각 부문의 합리화, 협동화, 민주화가 없는 물질만의 경제건설만으로는 조국근대화를 이룩할 수 없다며 제2경제론을 통한 조국근대화의 과제를 제시했다.<sup>5)</sup>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치관의 형성 즉 ‘정신적 측면의 근대화’도 중시하는 것으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통해 실제화 되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문공부가 출범하여 문화행정이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와 공보처로 나뉘어져 있었다. 영화검열과 단행본, 출판관련 업무를 공보처가 맡고 있었을 뿐 대부분의 문화행정업무는 문교부 문화국의 예술과와 교도과가

4) 황병주,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15, 역사문제연구소, 2005, 132쪽.

5) 「박대통령 연두회견 근대화는 균형성장으로, 제2경제란 정신적인 자세…」, 『조선일보』 1968년 1월 16일자 1면.

담당하고 있었다. 1952년 7월 대통령중심제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국무총리 직속 하에 있던 공보처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공보실로 축소·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공보처의 문화행정업무가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공보부가 발족하였다.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업무 등은 공보부가 관장하고, 문학, 미술, 문화재, 도서, 박물관, 종무행정 등은 문교부가 관장하였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1968년 문공부가 탄생하여 문화행정이 일원화되었다.<sup>6)</sup>

‘문화공보부’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선전하는 ‘공보’를 ‘문화’와 같이 다루는 기구로, 정치선전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sup>7)</sup> 당시 문공부의 출범은 ‘문화’측면보다는 ‘공보’기능에 근접한 것이었다. 이는 ‘문화’를 통한 ‘정권의 홍보’라는 박정희 정권기 문화행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69년부터 문공부는 문화예술전반을 종합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공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1969년 7월 14일~16일에 걸쳐 ‘조국근대화와 문화예술진흥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문공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며 진행사업을 평가하고, 조국근대화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종홍(朴鍾鴻)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과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화의 수용태도에 따라 개화의 노예, 개화의 손님, 개화의 주인을 구분하는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의 유길준(兪吉濬)의 논리를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는 근대화에 대입하였다. 강요에 의해 근대화하는 것을 근대화의 노예, 근대화를 흉내만 내는 것을 근대화의 손님, 주체성 있게 근대화하는

6) 문화공보부, 『문화공보30년』, 1979, 353~360쪽; 오양열, 앞의 글, 35~38쪽.

7) 이우영, 앞의 글, 48쪽.

것을 근대화의 주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박종홍은 그간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노예에서 시작하여 근대화의 손님을 거쳐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근대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껏 이룩한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정신문화에 근거를 둔 주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sup>8)</sup> 그러나 이후 문공부는 문예시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의 결여,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sup>9)</sup>

박정희 정권의 장기적 문예진흥정책에 대한 구상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1971년 부산지역의 대선유세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우선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충실한 실생활운동과 병행, 생활기풍쇄신에 힘쓰겠다”<sup>10)</sup>고 언급하며 문화예술분야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1971년 대선 시점에 문예진흥정책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71년 대선은 김대중의 등장으로 박정희에게 정권유지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킨 선거였다. 신민당의 대선후보였던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4대국 안전보장론, 예비군 폐지, 대중경제론 등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활발한 유세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반면 박정희는 대선기간동안 총 9차례밖에 대중유세를 하지 않았다.<sup>11)</sup> 그리고 유세연설의 초점은 대부분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과 김대중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박정

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논문선집1』, 1979, 12~22쪽.

9) 문화공보부, 앞의 책, 224쪽.

10) 『박후보 부산서 야인사 과감히 발탁 문예진흥으로 형평사회 이룩』, 『경향신문』 1971년 4월 24일자 1면.

11) 1971년 대선과 관련된 내용은 홍석률, 『1971년 대통령선거의 양상—근대화 정치의 가능성과 위험성』, 『역사비평』 여름호(통권87), 역사비평사, 2009 참조.

회 정권이 이전 시기 정책적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문화예술분야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71년 대선에서 나타난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여론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1971년 대선 여론은 <표1>,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1> 1971년 대통령 선거 직업별 후보자 지지성향**

직업	박정희	김대중	기타 후보	투표불참	모름/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노무자	49.6	27.4	1.8	12.1	9.1	100.0	1,898
기능공	43.7	34.7	1.7	11.3	8.6	100.0	2,598
기술공	40.6	34.8	1.4	13.8	9.4	100.0	1,785
기술자	35.6	40.8	1.6	14.1	8.0	100.0	765
기자	16.1	70.1	0.0	5.8	8.1	100.0	87

\*출처: 김세진·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공동조사자료(오창현,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176쪽 재인용).

**<표2> 1971년 대통령 선거 소득별 후보자 지지성향**

월소득	박정희	김대중	기타후보	투표불참	모름/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10,000원이하	32.6	30.3	2.2	19.8	15.2	100.0	2,393
1,000~20,000	46.4	34.8	1.4	10.2	7.2	100.0	3,359
20,000~30,000	52.2	35.9	0.8	6.5	4.6	100.0	1,837
30,000~40,000	41.2	43.0	0.3	8.6	7.1	100.0	724
50,000~100,000	36.6	40.6	0.5	10.9	11.4	100.0	202
100,000원이상	32.6	51.2	4.7	9.3	2.3	100.0	43

\*출처: 김세진·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공동조사자료(오창현,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177쪽 재인용).

<표1>, <표2>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소득수준이 높은 기술자들과 기자들의 경우, 다른 응답자 집단들과 달리 김대중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으로 보아도 월 소득 3만원 이상인 상대적 고소득자들이 박정희보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중산층과 지식인층에 더 많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sup>12)</sup> 이미 1969년 삼선개헌 때부

12) 오창현,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177~178쪽.

터 박정희의 장기독재에 대한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김대중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막고, 한국정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대안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이와 같은 성향은 박정희에게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김대중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향을 보여줄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였다. 하지만 대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건 결과적으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선대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창발로 문화 한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sup>13)</sup>라고 언급하며, 문예중흥정책을 강조하였다. 박정희의 대통령 집권 3기를 맞이하여 열린 한 일간지의 좌담회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문예중흥정책이 다음과 같이 주목되었다.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두교서를 비롯한朴대통령의 여러 담화문에서 문화부문은 항상 끝머리에 잠시 얼굴을 비치는 정도였습니다. 그 슬기롭고 빛나는 문화가 언제나 푸대접을 만나시켜 좀 섭섭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것이 사정이 영 달라졌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확실히 끝이 아니라 중간부분에 그것도 극히 적극적인 표현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중략)새로운 안보관 확립이나 경제건설 등 당면 이슈와 함께 문화적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은 종전과 다른변화를 실감케한다고 하겠습니다.<sup>14)</sup>

박정희 정권의 문예중흥정책에 관한 의지표명은 대선시기를 기점으로 확연히 부각되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정책적 변화가

13) 대통령비서실 편, 「제7대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사(1971년 7월 1일)」,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제7대편』6, 대한공론사, 1976, 5쪽.

14) 「집권3기의 비전 <상> 그 의지와 실천방향을 찾아보는 특별좌담회」, 『매일경제』 1971년 7월 3일자 3면.

주목된 것이다.

박정희는 1972년 예산교서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sup>15)</sup> 문공부를 중심으로 문예중흥정책의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후 박정희는 1973년 예산교서를 통해 경제정책에서 했던 것처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sup>16)</sup> 이로써 문예중흥정책이 본격화되었다.

## 2) 문예진흥법의 제정과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추진

문공부는 197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문예중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원, 예술원, 예총 등 기간단체와 30명의 관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으며, 광범위한 우편 의견조사를 통해 여론도 수렴했다. 우편조사는 총 676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04명 925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sup>17)</sup>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장기적 문화예술진흥책을 만들어 나갔다.

15)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민족 문화의 전통과 민족 사상을 체계 있게 정립시켜 나가면서, 국학의 개발과 고전의 연구 편찬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종합 박물관과 국립 극장의 완공을 계기로 문화 유산의 발굴·보존과 민족 예술의 전승·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고도 종합 개발을 명년부터 착수하여 찬란했던 선대의 문화를 재현시키는 <문화의 복원>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와 창작 기금의 설치 등 그 환경과 여건을 일신할 것입니다.”(대통령비서실 편, 『197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1971년 9월 2일)』, 앞의 책, 43쪽).

16) “우리나라의 오늘의 문화 예술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 총화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문화예술 활동의 보람과 의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문예진흥장기계획을 세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과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 사상과 주체 의식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체계화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문예중흥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합니다.”(대통령비서실 편, 『1973년도 예산안 제출 즈음한 시정연설(1972년 9월 2일)』, 위의 책, 275~276쪽).

17)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확정』, 『문예중흥5개년계획』, BA0136104,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9쪽.

문공부는 1971년 9월 27~28일에 '문예중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윤주영(尹胄榮) 문공부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 문예중흥의 기본 방향은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을 통한 문화 창조와 정신적 근대화를 이루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금 설치, 관계법령의 개정, 문화관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조직의 개편,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하는 기구설치 등의 구상이 발표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은 장기적인 원칙에서 다루며 정책수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기적(中期的) 목표를 세워 5년 단위로 끊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up>18)</sup>

이 세미나는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수립에 앞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문제에서부터 경제적 지원,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sup>19)</sup>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예중흥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문화예술을 경시하는 사회풍토의 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작의 자유보장과 창작기금이 정부를 비평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sup>20)</sup> 문화예술인들은 박정희 정권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환영했지만, 관(官)주도의 정책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11월에 문예중흥정책에 관한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15명의 문화예술인들로 초안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했다.<sup>21)</sup>

1971년 9월부터는 문예중흥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18) 「문예중흥의 기본방향」, 『조선일보』 1971년 9월 26일자 5면.

1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의 책, 1979, 68~94쪽.

20) 「문예중흥의 기본방향」, 『동아일보』 1973년 9월 30일자 5면.

21) 문화공보부, 앞의 책, 226쪽.

(이하 문예진흥법)의 성안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예진흥법은 문공부에서 성안하여 1971년 12월에 제78회 국회 13차, 14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문공부는 당초 연내에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공전되어 문예진흥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국가보위법에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를 열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개원되지 않았다. 국회는 장기간의 휴회 끝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72년 7월 3일에야 다시 개원될 수 있었다.<sup>22)</sup>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국가보위법안의 통과 이후 정부시책은 안보가 최우선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예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 문예진흥법은 국회가 다시 개원되고 나서 한 차례 더 문교공보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1972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72년 8월 14일 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문예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진흥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문예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문예진흥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다. 이 법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의 모금과 관련된 제6조 3항 및 제 7조였다.<sup>23)</sup> 당초 문예진흥법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22) 오창현, 앞의 책, 101쪽.

23)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여야의원 사이에 의견충돌은 없었다. 다만 문예진흥기금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다른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예진흥정책을 위한 각종 기구가 성립된 것은 유신체제의 수립이후부터였다. 문공부는 문예진흥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1973년 3월 9일 직제개편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관'을 신설했다. 문화예술진흥관은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문예진흥법 5조에 근거하여 1973년 4월 1일 국무총리 산하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문공부 장관과 예술원 회장, 위원에는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문교부장관, 학술원 회장, 예총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임명되었다.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계획, ③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었다.<sup>24)</sup> 이 위원회는 1973년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문예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1.문학·미술·음악·연예부문과 그 보급
- 2.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 3.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 4.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조 (기금의 모금)** 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8월 14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www.law.go.kr>)에서 검색(2010년 1월 11일).

24)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1972년 9월 29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www.law.go.kr>)에서 검색(2010년 1월 11일).

중흥선언문<sup>25)</sup>을 채택하고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동안 활동이 없다가 1977년 3월 28일에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사업실적을 심의하였다. 위원회 회의가 단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1972년 11월 13일에 문예진흥원은 곽종원(郭鐘元, 건국대 총장), 여석기(呂石基, 고려대 교수), 유치진(柳致眞, 드라마센터 소장), 이마동(李馬銅, 미협 이사장), 임원식(林元植, 서울예고 교장), 조성길(趙星吉, 문공부 문화국장), 김재연(金在演, 문공부 예술국장)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곽종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설립위원회는 문예진흥원의 정관안(定款案)을 작성하며 개원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나갔다. 1973년 3월 28일에는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원장에 곽종원, 부원장에 조성길이 임명되었다. 3월 31일에는 설립위원회가 해산되고 4월 1일부터 문예진흥원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청사(廳舍)를 마련하여 10월 11일에 개원하였다.<sup>27)</sup>

문예진흥원은 예술진흥부문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원,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및 보급활동의 지원을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관리와 문예진흥사업의 지원을 담당했다.<sup>28)</sup> 문예진흥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특수법인형태였다. 때문에 인사의 추천 및 선정과

25) 문예중흥선언문은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기초를 담은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박종홍, 박목월, 곽종원, 조연현, 김형석이 기초하였고, 1973년 10월 20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전국문화예술인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중략)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문예중흥선언문』, 『동아일보』 1973년 10월 22일자 5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93~94쪽).

26) 이우영, 앞의 글, 61쪽.

27) 조성길, 『문예진흥원의 운영방향과 사업』, 『문예진흥』 제1권 제1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6쪽.

28) 『제94회 국회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5년 9월 30일), 72쪽.

정,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이 문공부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 광종원은 문예진흥원장에 임명된 직후,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문예진흥원의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예술인의 궁극의 목적은 훌륭한 정신문화의 창조이며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 설립은 이러한 목적과 함께 예술의 효용성이랄까, 국민정신의 순화내지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계몽이나 계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29)</sup>

문예진흥원은 이처럼 국가의 정책방향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담당분야의 전문가 5인과 당연직 2인, 도합 7인으로 구성되는 지원심사위원회를 각 문화예술분야별로 조직하였다. 또한 몇몇 특별한 사업을 위한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sup>30)</sup>

문공부의 주관아래 관계부처의 합의와 각계의 논의를 거친 문예중흥정책은 1973년 6월 29일에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의원들이 검토하였고, 10월 2일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의 최종검토를 마쳤다.<sup>31)</sup> 문공부는 1973년 10월 19일에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sup>32)</sup>

예술문화의 침체와 변질, 도시와 농촌문화의 현저한 격차, 창작조건 of 불

29) 「정신문화고양에 주력 초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광종원씨」, 『경향신문』 1973년 3월 30일자 2면.

30) 문예진흥원 개원당시,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지원심의위원회로는 전통문화·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의 6개 분야에 10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상설위원회로는 국학개발, 무용개발, 연극레퍼토리 운영, 연극인회관 운영, 야외조형설치, 미술인 회관, 민족기록화 전승편 제작추진, 민족기록화 경제편 제작추진, 민족문학대계발간, 작가기금운영위원회 등 10개 분야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상설위원회로는 무용용어집발간·연극용어집발간·창작음악 악보 발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19개 분야에 23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조성길, 앞의 글, 7쪽).

31)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확정」, 『문예중흥5개년계획』, BA0136104,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10쪽.

32) 「윤문공 민족문화체계 정립」, 『경향신문』 1973년 10월 19일자 1면.

비(不備),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 미흡 등이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 계획의 전체적인 기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중흥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중점목표는 ①민족사관을 확립하고 새 민족예술을 창조한다 ②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③문화예술 국제교류의 적극화를 통해 문화부문의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이었다. 계획기간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문예중흥을 위한 기반구축이 중점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계획의 통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아래 두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문예진흥원, 예술원, 예총, 각 급 학교, 학술연구단체들의 횡적(橫的) 연계를 통해 창작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은 시도(市都)의 문화원, 새마을회관을 통한 지방문화진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sup>33)</sup>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은 ‘기반조성’<sup>34)</sup>, ‘민족사관정립(국학·전통예술·문화재)’, ‘예술진흥(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 ‘대중문화창달(영화·출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문공부는 각 분야별로 주관과를 설정하고, 해당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문화과(민족사관정립), 문화재2과(전통예능), 문화재1과(문화재개발), 예술과(문학·미술), 공연과(음악·연극·무용), 영화과(영화), 출판과(출판)에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sup>35)</sup>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계획 성안 시 책정된 예산 규모는 약 250억이었다. 그리고 연간 투입예산은 약 50억으로 계획되었다<sup>36)</sup> 계획의 재원별 투

33)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확정」, 『문예중흥5개년계획』, BA0136104,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12~13쪽.

34) 기반조성은 문예진흥법으로 대표되는 법령의 정비, 문예진흥원과 같은 기간단체의 설립운영,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제정, 문화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14~18쪽).

35)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확정」, 『문예중흥5개년계획』, BA0136104,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4~5쪽.

36) 「문예중흥에 250억투입」, 『동아일보』 1973년 10월 19일자 1면.

자실적은 <표3>과 같다.

<표3>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자원별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재원별	5년간 계획 및 실적 총합			년도별 실적				
	계획	실적	%	74	75	76	77	78
●정부예산	18,052.5	38,029.4	78.4	2,828.5	3,171.7	3,687.2	9,739.9	18,602.1
-일반회계	5,723.3	29,350.9	60.5	678.5	726.9	918.7	8,904.0	18,122.8
-문특회계	7,603.3	6,685.6	7.6	849.8	731.9	788.7	835.9	479.3
-경제회계	4,725.9	4,992.9	10.3	1,300.2	1,712.9	1,979.8	-	-
●민간자본	9,551.7	10,513.0	21.6	1,410.5	1,586.2	1,777.0	2,582.1	3,157.2
-문진기금	4,967.6	6,757.4	13.9	990.4	1,127.6	1,200.5	1,762.3	1,676.6
-영화기금	4,434.1	3,537.8	7.3	402.7	410.0	557.3	796.5	1,371.3
-출판금고	150.0	217.8	0.4	17.4	48.6	19.2	23.3	109.3
●총 계	27,604.2	48,542.4	100.0	4,239.0	4,757.9	5,464.2	12,322.0	21,759.3

\*출처: 문화공보부, 『문화공보30년』, 1979, 227쪽;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12쪽.

\*\*명시된 %는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자원별 투자실적에 따른 %임.

<표3>을 보면,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크게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으로 나뉘었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sup>37)</sup>로, 민간자본은 문예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출판금고로 구성되었다. 재원의 조성계획은 ①정부예산은 매년도 문공부 예산에 반영한다 ②문예진흥기금은 극장, 고궁 등으로부터의 모금으로 충당한다

37) 조세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는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특별하게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경우도 있는데 이를 ‘특별회계’라고 한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수·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문화재와 같은 소속재산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였다. ‘경제개발특별회계’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대충자금특별회계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정부의 투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송명헌, 앞의 글, 26쪽;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1963년 1월 1일), 『경제개발특별회계법』(1963년 1월 1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www.law.go.kr>)에서 검색(2010년 1월 11일)).

③영화진흥기금은 외화수출입대금으로 충당한다 ④출판금고는 문예진흥기금과 출판사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sup>38)</sup>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부문별 투자실적은 <표4>와 같다.

<표4>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부문별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비율(%)	74	75	76	77	78
기반조성	2,881.8	6.0	173.4	455.2	744.3	1,009.8	499.1
민족사관정립	34,079.7	70.2	2,206.6	2,719.8	3,001.0	8,818.0	17,334.3
예술진흥	5,929.9	12.2	1,200.2	825.1	858.4	1,347.4	1,698.8
대중문화창달	4,300.7	8.9	544.1	535.3	637.4	1,103.3	1,480.6
기타	1,350.4	2.7	114.8	222.5	223.1	43.5	746.5
<b>총계</b>	<b>48,542.4</b>	<b>100.0</b>	<b>4,239.0</b>	<b>4,757.9</b>	<b>5,464.2</b>	<b>12,322.0</b>	<b>21,759.3</b>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98쪽.

<표4>를 보면,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실제 투입액은 485억이었고, 총액의 70% 이상이 민족사관정립부문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예술진흥부문에 12%, 대중문화창달부문에 9%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3>에서 확인했듯, 계획기간 중 투자액은 78%가 정부예산으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계획성안 때부터 예술진흥부와 대중문화창달부의 사업진행은 민간자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대부분은 민족사관정립부문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사관정립부문에서도 문화재 관리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문화재 관리는 대부분 국난극복과 역사적 교훈을 남긴 전사유적(戰史遺蹟) 및 위인선열의 유적을 보수·정화하여 국민의 정신교육 도량(道場)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up>39)</sup> 이러한 ‘호국 문화유적의 복원과 정화’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민족문화정책이 갖는

38)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10쪽.

39) 이영도, 「기록을 통해 본 70년대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록인』여름호(통권7), 국가기록원, 2009, 86쪽.

가장 큰 특징이었다.<sup>40)</sup> 민족의 상징을 발굴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민족 문화정책은 집권 초인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과제였다. 1969년에는 문화재개발5개년계획(1969~1974)이 진행되기도 했다.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시작시점이 문화재개발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닿아있고, 실제 투입예산액에서도 예산의 70%이상이 민족사관정립부문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 초부터 유신체제기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정책이 지속성 있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민족문화정책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유신체제기 문예중흥정책 추진의 주요한 이유라고 설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투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전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반 문화예술과 대중문화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민간자본이 추진재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1년 대선에서 나타난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반박정희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유신체제 성립과정에서 드러난 지식인들의 반유신활동과도 관계가 있다. 즉 박정희 정권이 문예중흥정책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일면 끌어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은 왜 문예중흥정책을 통한 ‘통제·동원’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이는 당시 문화예술계의 지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신시대 일반 문화예술 분야의 헤게모니는 이른바 순수·참여 논쟁에서 보여지 듯 순수파의 득세로 특징지어졌다. 음악·사진·건축·미술·무용 등 제반

40) 1970년대 조성된 유적들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들, 강화도의 유적들, 유관순, 윤봉길 의사 등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의사들의 사당건립, 서울성곽을 포함한 전국의 성곽 보수 등으로, 전국의 호국국방유적들은 1970년대 거의 모두 복원되었다(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7,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90~91쪽).

예술분야는 어차피 일부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민중과 격리되어 있었으며 그 ‘순수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의 현실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반복하는 순수란 이름의 반리얼리즘, 혹은 비리얼리즘적인 조건에 노정되어 있었다.<sup>41)</sup>

주강현의 논의에 따르면, 유신체제기를 전후한 시점에 문화예술계의 지형은 기득권 세력이 유신체제에 친화적이었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양상이었다. 1972년 11월 16일 예총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문화예술인대회의 풍경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총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문화예술인 대회가 16일 하오(下午) 서울 시민회관대강당에서 3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회장 이해량) 주최로 열린 이날대회는 문예중흥선언문을 채택(중략) 동선언문은 또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10월 유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새마을 건설의 선도자가 되기를 맹세한다.”고 밝혔다.<sup>42)</sup>

문단(文壇)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948년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문단권력은 좌파계열 문인들의 월북과 전향으로 순수문학을 주창하는 ‘보수우익계열’의 문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제 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이 전면화되는 1970년대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한 일간지 기사에서 “한국의 문화단체사(文化團體史)의 특징은 이들의 성쇠(盛衰)와 집산(集散)이 혼란스러웠던 정치사와 같은 궤적을 그렸다는 점이다”<sup>43)</sup>

41) 주강현, 앞의 글, 620쪽.

42) 「문화예술인대회 문예중흥선언문 채택」, 『매일경제』 1972년 11월 17일자 7면.

라고 지적할 만큼, 당시 문단의 권력자들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sup>44)</sup>

당시 문화예술계는 친유신체제와 반유신체제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은 대부분 체제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동원’ 방식에 폭력성과 억압성을 내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같은 문화예술계의 지형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하는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정과 성격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술진흥부문의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이였다.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정과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했던 양상은 유신체제가 문화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기금 운용의 사례로써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당초 문공부는 자체예산확충을 통해 문예중흥정책의 재정을 충당하려고

43) 「주목 끌고있는 문협이사장선거 과벌중심문단에 해방후세대 도전」, 『동아일보』 1975년 1월 10일자 5면.

44) 5·16군사정권의 등장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강제적으로 통합되면서 문예조직도 ‘한국문인협회’로 단일화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적 문단은 당대권력에 더욱 유착·종속되는 정치적인 문학집단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보수적 문학론은 겉으로는 정치배제의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대 정치권력에 추종하는 자기모순의 어법을 구사했다. 그들이 ‘순수’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맥락 역시 진보적 담론에 대한 대응논리였지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순수문학론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진보적 민족문학론에 대한 대타의식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인 성격을 은폐한 순수문학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187~188쪽).

했다. 하지만 문공부가 신청한 1972년도 예산이 경제기획원의 예산조정과정에서 거의 다 삭감되어 문예중흥정책의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자체예산이 정부예산의 1%<sup>45)</sup>도 미치지 못했던 문공부는 경제건설에 치우친 국가정책으로 인해 예산획득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문공부는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문예중흥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예중흥정책을 위한 예산이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제도적 보장을 고민하게 되었다.<sup>46)</sup> 그리고 문예진흥법에 이러한 방안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상의 조항을 삽입하였다.<sup>47)</sup>

1971년 12월에 열린 13, 14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문예진흥법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주영 문공부 장관은 문예진흥법안을 제안·설명했다. 문공부 장관은 문예진흥법안의 제안배경에서 각국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는 장기적인 문화정책계획과 공공시설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충당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었다. 미국은 1964년 국가예술진흥법을 마련하여 연방예술위원회와 연방예술인 문화재단을 구성하여 예술정책과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예술활동에 대한 기부액에 있어 면세특혜를 주고 있었다. 영국은 지방세금의 일부를 예술활동에 지원하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 중화부흥절을 제정하고 중화부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문공부 장관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sup>48)</sup>

문예진흥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큰 의견의 대립없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만 몇몇 의원들을 중심

45) 정부예산 대비 문공부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1961년에는 0.8%, 1962년에는 0.89% 1969년에는 0.61%였다.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78년에는 이보다 줄은 0.5%였다(문화공보부, 앞의 책, 416쪽).

46) 「문예중흥의 공약나팔 구두선 우려」, 『동아일보』 1971년 8월 30일자 5면.

47) 「문화급고기금민간기부로」, 『경향신문』 1971년 9월 1일자 5면.

48) 「제78회 국회 13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1년 12월 18일), 2쪽.

으로 문예진흥기금이 민간모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정희의 처남인 민주공화당의 육인수(陸寅修) 의원은 민간모금방식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며,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거창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에다가 정부가 집중적으로 어떠한 돈을 대주어 가지고 입장료라든지 공연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기타를 내려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돈 걸기 쉬운 데에서 다 걷는다 이 얘기입니까?<sup>49)</sup>

문예진흥기금의 민간모금방식에 관한 비판에 대해 문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문화공보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발견하셨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와같은 예술인 문화인들의 활동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만 가지고는 이와같은 문예진흥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이 어려운 과제에 맞부딪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으로써 거기에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하게 된 것입니다.<sup>50)</sup>

국가예산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문공부 장관도 문예진흥법이 문예진흥기금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신민당의 신도환(辛道煥) 의원과 최병길(崔秉吉) 의원은 문예진흥법이 모금만을 골자로 하는 궁색한 법안이 아닌가 우려하며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 문예진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도환 의원은 이미 고궁이나 문화재 시설들의 입장료가 문화재

49) 앞의 회의록, 11쪽.

50) 위의 회의록, 14~15쪽.

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고 있는데, 또 문예진흥기금의 명목으로 입장료에 모금액을 부과하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공화당의 이도선(李道先) 의원은 선진국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진국처럼 기업이나 유산자(有産者)에게 모금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간모금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안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각종 면세나 기업모금, 재단설립과 같은 방식들을 제안했다.<sup>51)</sup>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72년 7월 3일 국회가 개원되고, 7월 28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문예진흥법이 다시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문예진흥법의 조항과 문구수정에 대한 논의들만이 오고갔을 뿐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비판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sup>52)</sup>.

문예진흥법의 제정 이후 문예중흥정책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문예중흥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예술진흥부문과 대중문화창달부문의 주요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시작되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전국극장연합회가 대행하여 전국 극장 384개를 대상으로 모금되었다. 1975년 2월 27일 이후에는 기금조성의 다원화를 위하여 모금 대상처를 확대하여 극장에 이어 고궁에서도 모금이 시작되었다. 1976년부터는 박물관, 1978년부터는 연극전용 극장 등 일반 공연장까지 모금이 확대되었다.<sup>53)</sup>

입장료에 부과되는 모금액은 다음과 같았다. 극장 입장료가 50원인 경우는 모금에서 제외되었다. 50~100원은 5원, 100~200원은 10원, 200~300원

51) 「제78회 국회 14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1년 12월 20일), 10~14쪽.

52) 「제82회 국회 3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2년 7월 28일), 21~26쪽.

5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의 책, 1993, 108~109쪽.

은 20원, 300~400원 30원, 400~500원은 40원 등으로 일정의 요율에 따라 입장료에 모금액이 부과되었다.<sup>54)</sup> 고궁의 경우는 대인 입장객 1인당 20원의 모금액이 부과되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진행양상은 '1974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0개 극장 및 시도 극장협회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 실태조사서'<sup>55)</sup>를 통해 엿볼 수 있다. ①모금에 대한 기록 작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②모금된 기금의 불입(拂入)이 대체로 지연되나 모금 독촉에 소극적이다 ③극장주들이 기금 첨가로 인하여 수입 면에서 결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모금관리기록을 통일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매월 10일 단위로 마감 불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극장연합회와 문예진흥원에 전국극장별 카드를 비치하여 불입을 점검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극장주들이 수입 면에서 결손을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은 극장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또 일반 국민에게 모금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초 일간지에 광고하거나 대한뉴스 말미에 표어를 내보내도록 계획하였다.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에 일정요율의 모금액을 부과하는 '준조세'였다. 일반인들이 대중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금에 참여하게 되는 반강제적인 형식이었던 것이다. 상술하였듯,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극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극장은 문화시설 중 대중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 있었다. 또 고궁이나 사적의 입장료가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조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에 대한 이중부담을 준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금

54) 「제94회 국회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5년 9월 30일), 74쪽.

55)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문예진흥기금극장모금실태조사결과」, 『문예진흥5개년계획』, BA0136 107, 197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처의 확대는 문예중흥정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차 문예중흥5개년 계획 기간 중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실적은 <표5>와 같다.

<표5>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 중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단위:천 원)

항목/년도	73	74	75	76	77	78
•모금수입	263,520	786,339	1,105,132	1,218,656	1,823,375	2,961,350
-공연장	(263,520)	(786,339)	(1,070,408)	(1,164,517)	(1,730,220)	(2,850,798)
-고 궁			(34,724)	(47,315)	(86,115)	(110,069)
-박물관				(6,824)	(7,040)	(7,583)
•기타수입	5,248	32,946	39,581	83,389	109,082	258,424
•총 계	268,768	819,285	1,144,713	1,302,045	1,932,457	3,219,774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112쪽 참조.

문예진흥기금은 모금수입과 기부금 수입, 공익자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표5>과 같이 순수모금수입은 80억이 넘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총액의 94%에 이르렀다.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기간동안 문예진흥기금 수입은 전적으로 ‘모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기간 중 문예진흥기금의 투자실적은 <표6>과 같다.

<표6> 문예진흥기금 부문별 투자실적(1974~1978)

(단위:백만원)

부문	합계	비율(%)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기반조성	899,752	13.3	93,431	155,606	134,825	267,093	245,342
•전통문화개발	896,297	12.9	183,778	183,637	184,904	167,010	149,705
•예술진흥	1,637,817	24.2	314,881	267,409	319,560	263,810	472,157
•대중문화창달	814,235	12.0	119,584	74,869	70,500	273,514	275,768
•기 타	2,540,126	37.6	278,778	446,124	490,698	790,856	533,670
•총 계	6,757,509	100.0	990,452	1,127,645	1,200,487	1,762,283	1,676,642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979, 68쪽.

문예진흥기금은 예술진흥부문과 대중문화창달부문의 주요재원으로 설정되었지만, <표6>에서 보이듯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문화예술 창달을 주창하던 정부는 문예중흥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인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인식’과 ‘실천’의 동일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재원만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타파하기 어려운 현실<sup>56)</sup>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예중흥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결국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모금방식의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문예중흥정책의 추진재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까.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국가의 지원은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국가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양상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살펴보겠다.

---

56) 「문화예술진흥법 초안작성」, 『동아일보』 1971년 9월 1일자 5면.

### Ⅲ.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실상

#### 1)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추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의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양상을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은 문학분야의 지원사업 중에서 ‘上之上策’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sup>57)</sup> 1974년 2월 8일 개최된 문학분야의 간담회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최대의 관심거리는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과 그 대상이었다.<sup>58)</sup> 1978년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의 평가서에서는 이 사업을 문학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sup>59)</sup> 이 사업은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기간동안 지속성 있게 추진되었고 매해마다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며, 1989년에 종료되었다.

당시 각종 문예지와 종합지는 월간지, 계간지를 모두 합해 10여종이 넘지 않았으며, 잡지사 자체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때 원고료는 1970년대 안팎에 책정된 금액이었다. 원고료는 원고지 1장당 100~300원, 시 1편당 2,000~3,000원이었으며 인세도 1~5%선의 적은 금액으로 문인들이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게다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sup>60)</sup>

5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지원고료지원에 대한 반응」, 『문예진흥』제1권 제2호, 1974, 20쪽.

58)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문화예술인(문학,출판분야)간담회개최결과보고」, 『문예진흥5개년계획』, BA0136107,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59)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진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진흥5개년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66쪽.

60) 노동청이 조사한 1970년 노동자 임금실태를 보면, 노동자의 총 평균임금은 16,000원~17,000원이

1971년 조연현(趙演鉉)은 10년 이상 작가생활을 해온 현역 문인 260명을 대상으로 수입구조에 대해 조사하였다. 당시 문인들의 수입 중 작가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90%이상인 문인은 단 7명뿐이었다. 50%이상은 21명, 30%이하가 15명, 10%이하가 29명, 나머지는 5%이하이거나 작가활동을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1)</sup> 1972년에 한국문인협회와 펜클럽 한국 본부는 문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자 잡지·출판사에 원고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80%이상 인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62)</sup> 1974년 한국문인협회에 등록된 1,250명의 문인 중 90%이상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sup>63)</sup> 이러한 상황에서 문인들은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74년 2월 문예진흥원은 문예지 원고료 지원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후 매 차년도마다 지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문예지와 규모를 결정했다.<sup>64)</sup>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을 심의하여 우선적으로 월간 문예지인 『현대문학』, 『월간문학』, 『한국문학』, 『문학사상』을 선정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 방식은 1개의 문예지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잡지사는 자체고료와 문예진흥원의 보조금을 합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이때 잡지사의 자체고료와 문예진흥원의 보조금은 50:50이거나 문예진흥원의 보조금이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된 4개의 문예지는 3월부터 매호(每號) 발간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4개의 문예지는 당시에 대표적인 월간 문예지였다.

문예진흥원은 1974년 6월부터 원고료 지원 대상 문예지를 확대하였다. 시

었다(「실질임금 상승 연 8.6%뿐」, 『동아일보』 1971년 3월 13일자 3면).  
 61) 「수입찾아 일에 쫓기는 아르바이트 풍조」, 『경향신문』 1971년 4월 23일자 5면.  
 62) 「문예진흥원 창작문학 지원따라 원고료 인상 움직임」, 『동아일보』 1974년 3월 8일자 5면.  
 63) 「문인 주름 얼마나 퍼질까」, 『경향신문』 1976년 12월 26일자 5면.  
 64) 심사위원은 황순원(소설가), 김현승(시인), 유주현(소설가), 홍윤숙(시인), 김윤식(문학평론가), 박종원(문학평론가), 장상규(문공부예술국장) 총 7인이었다.

(詩) 전문지인 『현대시학』<sup>65)</sup>, 『심상』<sup>66)</sup>, 『시문학』<sup>67)</sup>과 수필 전문지인 『수필문학』<sup>68)</sup>에 매월(每月) 1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계간지인 『창작과 비평』<sup>69)</sup>, 『문학과 지성』<sup>70)</sup>, 『아동문학』은 매호(每號)마다 15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시 전문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시분야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충, 한국문인협회, 시조협회, 현대시협 등의 문인단체가 문예진흥원에 시정 요구한 것이 수용된 것이었다.<sup>71)</sup> 계간지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65) 『현대시학』은 1969년 5월 전봉건(全鳳健) 등이 창간한 월간 시 전문지이다. 발행인은 송준환(宋準煥), 창간 당시 편집위원은 박두진(朴斗鎭), 박목월(朴木月), 박남수(朴南秀), 구상(具常), 김춘수(金春洙), 전봉건(全鳳健)이었다. 편집위원의 명의로 된 창간사에서 범시단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우리는 이 잡지를 몇몇 시인의 전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시단적으로 넓게 기회를 나누어 주어 명실상부한 범시단지를 만들 생각이다”라고 창간의 이유를 밝혔다(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사, 2004, 3266쪽).

66) 『심상』은 최초의 시 전문 잡지이다. 1973년 10월 박목월(朴木月), 박남수(朴南秀), 김종길(金宗吉), 이형기(李炯基), 김광림(金光林) 등이 창간하였는데, 동인지의 성격을 탈피한 폭넓은 시 전문 월간지이다. 편집인 겸 발행인은 박목월이었다(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 한국사전연구사, 2004, 1811쪽).

67) 『시문학』은 1971년 8월에 창간된 월간 시 전문지이다. <현대문학>의 자매지로 발행인은 김광수(金光洙), 주간은 조연현(趙演鉉)이었다. 창간취지는 모든 시인들이 이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영혼을 새길 것이며, 독자들에게 인격도야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위의 책, 1703쪽).

68) 『수필문학』은 1972년 3월에 창간된 월간 수필 전문지이다. 박연구(朴演求), 김승우(金承禹) 등이 창간하였고, 편집인은 김효자(金孝子), 주간은 박연구였다. 수필을 문단권외시(文壇圈外視)하던 당대 문단 상황에서, 진정한 수필문단을 형성하고 전국 수필동인들의 발표지면을 확보하여 수필문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간되었다(위의 책, 1671쪽).

69) 『창작과 비평』은 1966년 1월에 출간된 계간문에 및 사회비평 전문잡지이다. 백낙청(白樂晴)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 성격의 잡지였다. 1970년대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계층과 사회의 현실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관심을 가진 일반인, 그리고 문제의식 있는 문인들 사이에서 문예적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과급효과를 나타냈다. 1980년 7월에 정부의 출판물일제정비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어 폐간되었다. 그 뒤 8년만인 1988년에 복간되었다(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사, 2004, 2827~2829쪽).

70) 『문학과 지성』은 1970년 8월에 창간된 문예지이다. 김병익(金炳翼), 김치수(金治洙), 김현 등이 참여하였다. 발행인은 한만년(韓萬年), 편집인은 황인철(黃仁喆)이었다. 1975년 12월 ‘문학과 지성사’로 출판사를 창립하였다. 이때 발행인 겸 편집인은 정지영(鄭智英), 주간은 김병익이었다. 1980년에 폐간당했다가 1988년 『문학과 사회』로 이름을 바꾸어 복간되었다. 4·19의거 문학의식과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지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1970년대 대표적인 문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크게 기여하였다(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 한국사전연구사, 2004, 1072쪽).

71) 『현대시학』등 시전문지에 매월 20만원씩 지원키로, 문예진흥원 내정, 『조선일보』 1974년 3월 19일자 5면.

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 실태를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 중 문예지 원고료 지원 실태

(단위:천 원)

문예지명/연도	74	75	76	77	78
현대문학	5,000	6,000	6,000	15,900	17,568
한국문학	5,000	6,000	6,000	20,472	19,988
문학사상	5,000	6,000	6,000	19,353	19,118
월간문학	6,000	6,000	6,000	(10,800)	(19,200)
소설문예			2,400	9,131	
심상	6,00	1,800	2,400	4,931	8,825
시문학	6,00	1,800	2,400	9,171	11,059
현대시학	6,00	1,800	2,200		
수필문학	6,00	1,800	2,400	4,997	
창작과비평	300				
문학과 지성	300				
아동문학	150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164~167쪽.

\*\* ( )는 발간비 지원.

<표7>에서 알 수 있듯,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 중 지속적으로 문예지 원고료 지원을 받았던 문예지는 『현대문학』, 『월간문학』, 『문학사상』, 『한국문학』, 『심상』, 『시문학』이었다. 『현대문학』은 1955년 창간된 문예지이며 1950년대 초반 순수문학계의 주요 발표 문예지였던 『문예』의 후신으로 유신체제를 옹호했던 조연현이 발간의 중심인물이었다.<sup>72)</sup> 『현대문학』은 1970년대 당시까지도 월간 판매부수가 1만부에서 최고 1만 5천부에 이르렀고, 여타 문예지를 압도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sup>73)</sup>

72) 이후 『현대문학』, 『월간문학』, 『한국문학』의 성격 및 창간배경 분석은 홍기돈, 「김동리와 문학권력」, 문학과비평연구회,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참조.

73) 국어국문학회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소, 2004, 3264쪽; 잡지협회 편, 『한국잡지총람-1972년 이후 한국의 잡지사』, 한국잡지협회, 1982, 446쪽.

1968년 창간된 『월간문학』은 김동리(金東里)가 그 해 한국문인협회의 이사장에 당선되어 발간한 한국문인협회 공식 기관지로 문공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창간되었다. 김동리는 1968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현대문학』의 주간인 조연현과 경쟁하여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조연현과 결별하게 되어 『현대문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새로운 매체 발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청해 『월간문학』을 창간한 것이었다.

1973년 창간된 『한국문학』은 김동리가 창간한 문예지였다. 김동리는 1973년 한국문인협회 선거에서는 조연현에게 패배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현대문학』에 이어 『월간문학』이라는 발표 매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문학』의 창간배경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창간된 『문학사상』은 이어령이 문단과 분과에 관계없는 문학 의식을 갖고 있는 문예지를 만들고자하는 의도에서 창간되었다. 거의 모든 경영과 편집은 이어령이 도맡았다.<sup>74)</sup> 그는 『문학사상』을 통해 문단적인 발언보다는 해외문학사조나 문학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거나 한국문학의 자료 발굴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문학보다는 예술적 감동을 추구하는 문학 독자들을 키워나가하고자 했던 것이다.<sup>75)</sup> 『문학사상』이 창간되던 1972년 10월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던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문학사상』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문학주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sup>76)</sup>

4개의 월간문예지와 마찬가지로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기간 동안 문예

74) 국어국문학회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 한국사전연구소, 2004, 2125쪽.

75) 이어령·이상갑, 「전후 문학과 우상의 파괴」, 강진호 외 지음,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83쪽.

76) 엄철, 「비어 있는 중심을 위하여-이어령과 <문학사상>」, 문학과비평연구회, 앞의 책, 313쪽.

지 원고료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시 전문지도 발간 당시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문단권력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71년 창간된 『시문학』은 『현대문학』 및 현대시인협회와의 자매관계인 시 전문지로 발간 당시 주간은 조연현이었다.<sup>77)</sup> 김동리 계열의 문인 이근배(李根培)는 『시문학』은 조연현 계열이 한국문인협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단 내에 반이 넘는 시인들을 규합할 필요에 의해 발간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1971년 8월에 창간하고도 조연현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 당선된 후인 1973년 9월에 『시문학』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sup>78)</sup> 『심상』은 1973년 10월 발행한 시 전문지로 창간당시 편집인 겸 발행인은 박목월이었다. 박목월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문단의 주류를 형성한 이른바 ‘한국문인협회 정통파’의 핵심인물이었다.<sup>79)</sup>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이처럼 문단권력 혹은 유신체제에 대한 입장과 연계성을 가지고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예진흥원의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시행 후 우선적으로 지원 문예지로 선정되었고, 1회 발행 당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금(50만원)을 받았던 4개의 월간 문예지는 발간의 중심인물들이 문단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이거나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유신체제와 문단권력과의 친화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리는 1974년 12월 ‘문학인시국선언발기회’ 명의로 “안정을 위해 총화” 해야 한다는 유신찬동적인 시국선언을 문인가정에 발송하여 찬반을 물어 문인들 사이에 물의를 일으켰다.<sup>80)</sup> 문학평론가 김우중(金宇鍾)은 이러한 행위는 김동리가 문인들이 모두 유신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작된 충성심을 문단의 여론인

77) 「월간시문학 창간」, 『동아일보』 1971년 7월 4일 5면.

78) 홍기돈, 앞의 글, 157쪽.

79) 류찬열, 「문학의 권력화와 정전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서정주와 박목월을 중심으로」, 문학과비평연구회, 앞의 책, 197쪽.

80) 「“안정위해 총화” 내용 시국선언 문인가정에 발송 문인53명 발기명의」, 『동아일보』 1974년 12월 19일자 7면.

것처럼 하여 박정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sup>81)</sup> 조연현의 경우,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논설을 써서 일간지에 기고하기도 했다.<sup>82)</sup> 또 그가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장에 있을 때, 문화유신 및 민족예술증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심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sup>83)</sup> 이 외에도 한국문인협회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의 문학단체들은 ‘문인간첩단사건(1974)’이 발생했을 때, 단체 차원의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sup>84)</sup> 당시 문단권력의 정치적 입장은 유신체제의 옹호자 혹은 방관자였고,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문단권력과 연관된 문예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틈 속에서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sup>85)</sup>을 거친 일군(一群)의 소장파 문인들이 반유신활동에 참여하고, 문예지를 발간하여 자신들만의 문학적 지향성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소장파 문인들의 대표적인 문예지는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예지에 대한 문예지원고료 지원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에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81) 김우중·안남일, 『순수문학 비판과 참여문학의 도정』, 강진호 외 지음, 앞의 책, 156쪽.

82) 조연현은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①남북평화통일이 의무적이 과제가 되었고 ②국민적정치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당정치로 인해 사회정당간의 이합집산과, 국회의원의 부정 등 문제가 많았는데 유신헌법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분산된 국력이 하나로 조직되어 국민적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한 것이다(조연현, 「내실의 기틀 유신 헌법안」,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5면).

83) 「심의규정 대폭 강화키로 예술문화윤위 간담회」, 『경향신문』 1971년 11월 20일자 5면.

84) 주장현, 앞의 글, 657쪽.

85) 순수-참여문학논쟁은 순수문학이 문단권력과 담론권력을 동시에 누리며 1960년대까지 문단을 지배하자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제기된 논쟁이다. 1960년대 접어들어, 관제미학으로서의 순수미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학과 예술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정당한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학사에서 이른바 ‘순수-참여문학 논쟁’으로 부르는 논쟁이다(한수영, 「순수문학이라는 오해」, 『역사용어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282~283쪽).

## 2)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에 대한 지원철회

문예진흥원은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2차년도에 들어와 계간지에 대한 원고료 지원을 철회하였다. 1974년 하반기 가을, 겨울 호 총 2회의 원고료 지원을 끝으로 계간지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 것이다. 문예진흥원은 『창작과 비평』측에 2차년도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나 사무절차문제로 지원이 늦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래서 『창작과 비평』은 작가에게 인상된 금액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1975년 봄 호를 만들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간지에 대한 지원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게 된 것이다.<sup>86)</sup>

당시 문예진흥원이 발표한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의 사유는 ①계간지의 성격이 동인지(同人誌)<sup>87)</sup>에 가까웠다는 것, ②문학과 비문학분야(연극·음악·미술·무용 등)에서 마구 계간지를 만들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의 혼선을 미리 막자는 것, ③시 전문지에 대한 투자증액 등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창간될 문예지에 대해서는 월간, 계간을 가리지 않고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sup>88)</sup>

당시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의 사유인 동인지라는 성격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기존 문단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걸쳐 대략 50여 종류의 동인지들이 창간되었는데 한국문인협회의 현실적인 한계와 보수성을 뛰어넘으려는 뚜렷한 지향성을 가진 잡지들이었다. 기성세대의 보수적 문학관과 문단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문학적

86) 신동문·이호철·신경림·염무웅·백낙청, 「창비 10년:회고와 반성」, 『창작과 비평』봄호(통권39), 창작과 비평사, 1976, 18쪽.

87) 동인지는 사상·주의주장 또는 수법과 경향 등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출자(出資)하거나 또는 독지가의 원조를 받아 편집, 발행하는 잡지로 그 잡지에 참여하는 사람을 동인(同人)이라고 한다(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 한국사전연구소, 2004, 852쪽).

88) 「문예지고료지원 사실상 줄어」, 『조선일보』 1975년 4월 19일자 5면.

경향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예지를 통해 자신들의 문학적 다양성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sup>89)</sup> 동인지를 1960년대부터 기존문단에 대한 대항적인 문예지로 평가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시 문단 차원에서는 동인지적 성격의 잡지를 이상적인 문예지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동인편집체제라야 개성 있는 잡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90)</sup> 백낙청(白樂晴)은 “『창작과 비평』이 과연 동인지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같은 진흥원 지원금을 받는 시 전문지 같은 것보다 더 동인에게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sup>91)</sup>라고 말하며 동인지적 성격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문공부에서 발표한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의 사유는 문면(文面) 그대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인지의 성격에 가깝다는 지원철회의 사유는 해당 문예지가 내포한 정치적 입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2차년도에 지원이 철회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은 소장파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대표적인 문예지였다. 소장파 문인들은 1960년대의 순수-참여문학논쟁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잡지와 출판사 등 발표의 근거지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당대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형상화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sup>92)</sup> 이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계간지를 통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의 창간배경을 통해 그 성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창작과 비평』은 1966년에 창간되었다. 백낙청은 『창작과 비평』의 창간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①미국 유학생활동안 한국문예지를 더러 접했는데 질적으로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규모더라도 새

89) 하상일, 「전후비평의 타자화와 폐쇄적 권력지향성-1970년대 <문학과 지성>에콜을 중심으로」, 문학과비평연구회, 앞의 책, 286~287쪽.

90) 「계간지도 고료지원」, 『경향신문』 1977년 10월 27일 5면.

91) 신동문·이호철·신경림·염무웅·백낙청, 앞의 글, 18쪽.

9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970』Ⅳ, 시공사, 2004, 20쪽.

로운 문예지를 발간하여 한국 문예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했으며, ②6·25 이후 한국문단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른바 순수문학이란 기치아래 사회적 관심이 배제된 문학 위주가 된 상황에서 문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3)</sup>

『문학과 지성』은 1970년에 창간되었다. 『문학과 지성』 발간의 중심인물은 김현, 김병익(金炳翼), 김치수(金治洙), 김주연(金柱演)이었다.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창작과 비평』에 맞서 문학의 자율성을 견지할 새로운 동인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현과 동아일보 기자로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을 수 없어 자조감과 무력감에 빠진 기자사회에 대한 탈출구를 고민하던 김병익, 그리고 이 작업에 시종 공감했던 김치수가 함께하여 1970년 9월 『문학과 지성』이 그 첫 호를 발행하게 되었다.<sup>94)</sup>

이처럼,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은 서로 다른 문학적 지향성을 가진 문예지였지만 기존 문단권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공통점이 있었다.<sup>95)</sup> 그렇다면 문예진흥원은 1차년도에 계간지에 대한 지원을 시행했음에도 왜 그 다음해에 지원을 철회한 것일까. 그 이유는 1974년에서 197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소장파 문인들이 보인 반유신 행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신체제에서 소장파 문인들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과 같은 계간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느슨한 집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문인의 인권 수호와 시국에 대한 문인의 입장을 모으기 위한 단체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결성하여<sup>96)</sup> 반유신활동을 펼쳤다. 특히

93) 백낙청·하정일,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미래』, 강진호 외 지음, 앞의 책, 451쪽.

94) 채호기 외 지음, 『문학과 지성사 30년:1975~2005』, 문학과 지성사, 2005 참조.

95) 김병익에 따르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문학적 입장은 달리하지만 유신권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태도는 공동의 입장인니까, 우리가 잡지로서 서로 교류를 하자 해서 염무웅 씨가 『문학과 지성』에 글을 쓰고 내가 『창작과 비평』에 글을 쓰고 그런적도 있지요.”(김병익·김동식, 『4·19 세대의 문학이 걸어온 길』, 강진호 외 지음, 위의 책, 264쪽).

96)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앞의 책, 21쪽.

이 시기는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발간의 중심인물인 백낙청과 김병익의 반유신활동이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창작과 비평』의 창간자인 백낙청은 1974년 ‘개헌청원지지 문인61인 선언’을 주도했다. 같은 해 11월 결성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회원으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문학인 101인 선언’<sup>97)</sup>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12월에 있었던 ‘민주회복국민선언’에도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의 즉각적인 탄압을 받았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것을 빌미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것이다.<sup>98)</sup>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병익은 1974년 10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지부는 10월 24일 ‘언론자유선언’<sup>99)</sup>을 발표했다. 이후 31개의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자협회는 산하에 ‘언론자유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유신활동을 펼쳤다.<sup>100)</sup> 김병익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운동의 탄압으로 인해 1975년 10월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다. 김주연은 “김병익이 한국기자협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부터, 사실상 『문학과 지성』의 순수한 문학적 열정이 차

97) ‘문학인 101인 선언’은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식에서 발표된 선언이다. 이날 선언에서 문인들은 “오늘날 우리 현실은 민족사적으로 일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몇몇 정치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맡겨질 일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지혜와 용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선언한 뒤 ①시인 김지하를 비롯해 긴급조치로 구속된 지식인·종교인·학생의 즉각 석방 ②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사상의 자유보장과 모든 지식인의 자유수호운동 ③서민대중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현행 노동법의 개정 ④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의 마련 ⑤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형태의 당리당락에도 이용되어서는 안 될 문화자적 순수성의 발로이며,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될 인간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라는 내용의 5개항을 결의했다(가람기획 편집부, 『한국현대문학작은사전』, 가람기획, 2000, 199쪽).

98) 그의 파면 사유는 ‘교육공무원법위반’이었다. 문교부는 민주회복국민선언의 서명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라 백낙청을 교수직에서 파면하였다(『유문교, 서울대총장에 백낙청 교수 파면 통고』, 『경향신문』 1974년 12월 21일자 7면).

99) ‘언론자유선언’에서 기자들은 ①언론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 ②기관원의 출입 거부 ③언론인의 불법 연행 거부 등 3개항을 결의하였다.

100) 김대영, 『반유신 재야 운동』, 안병욱 외 지음, 앞의 책, 418쪽.

춤 정치적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선에는 황인철(黃仁喆)의 존재도 주요했다. 황인철은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과 같은 각종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였다. 그는 『문학과 지성』의 발행 초기에 김병익으로부터 원고료 지원요청을 받고 매호 필요한 원고료를 지원해 주었다. 또 황인철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박정희 정권에 의한 각종 필화 사건과 정·폐간 등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편집인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sup>101)</sup>

백낙청과 김병익은 유신체제기 내내 반유신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1974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그들의 활동은 문학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 행동으로 확장되는 시점이였다. 또 유신초기 지식인의 ‘자유실천운동’<sup>102)</sup>차원에서 백낙청과 김병익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양상은 1차년도에는 문단권력과 연계된 문예지와 여타의 문예지에 지원의 차별성을 두는 정도였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가 시작되었다. 1975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에 대한 지원철회를 보면 문예지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태도가 지원여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문단권력과 연계된 문예지를 ‘선별적으로 육성’하였고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예지인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은 지원에서 ‘배제’했다. 이때 친유신체제 혹은 반유신체제라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 지원사업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01) 김주연, 『문학과 지성사의 출범과 70년대』, 채호기 외 지음, 앞의 책, 49쪽.

102) 유신초기 자유실천운동은 ‘자유언론실천운동’과 ‘자유실천문인운동’ 및 ‘해직교수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대영, 앞의 글, 418쪽).

### 3) 1977년 문예지 원고료 지원방식의 변화

1977년 이후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방식이 변경되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예지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이때의 배제는 지원철회라는 ‘직접적인 형식의 배제’뿐만 아니라 지원 문예지와 여타 문예지의 원고료 격차를 벌려 원고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문예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간접적인 형식의 배제’도 포함된 것이었다.

문예진흥원은 1977년 초에 문예지 원고료 지원금을 총액 3천 6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3배가량 인상하며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1977년 변경된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각 문예지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각 사(社)에 따라 신축성을 두었고, ②사전 지원형식을 지양, 사후 지급을 하게 되었으며, ③각 사에 자체부담액을 신설하였다.<sup>103)</sup> 문공부는 지원방식의 변경이 그동안 잡지사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자체 부담액을 올리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04)</sup> 또 원고료 상승의 효과가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일반 교양지의 원고료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원고료 상승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1977년 문예지 원고료 지원방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잡지사의 자사부담을 의무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문예지 수록작품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원고료가 결정되었다. 이때 지급되는 원고료는 잡지사가 원고료 총액의 3분의 1을 자체부담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잡지사 자체부담액과 지원금간 원고료 분담금액은 <표8>과 같다.

103) 「문학지는 백60만원까지-원고료지원금 첫 지급」, 『동아일보』 1977년 2월 9일자 5면.

104) 「문예부흥 기반조성에 역점」, 『매일경제』 1977년 1월 18일자 6면.

<표8> 잡지사 자체부담액과 지원금 간 원고료 분담금액

(단위:원)

분야	등급	77~82			지원액 산정기준
		잡지사	지원금	계	
시	특급				*시 편당  *산문 원고지1장 당
	A급	4,000	11,000	15,000	
	B급	3,500	9,500	13,000	
	C급	3,000	8,000	11,000	
소설 희곡 평론 동화 등	특급				
	A급	600	900	1,500	
	B급	500	800	1,300	
	C급	400	650	800	
기타 (수필등)	특급				
	A급	600	600	1,200	
	B급	500	500	1,000	
	C급	400	400	800	
	D급	300	300	600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170쪽.

이로써 잡지사는 원고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문예진흥원은 『현대문학』을 포함한 총 8개사에 이전 지원액보다 3배 증액된 830만원을 1977년도 1월분 원고료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문인들은 기존의 원고료에서 약 2배 인상된 원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105)</sup>

원고료 지원금의 증액과 자사부담율의 신설로 인해 원고료 지원 문예지와 미지원 문예지 사이의 원고료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여기에 잡지사의 자체부담액까지 더해져 원고료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문학』, 『심상』, 『현대시학』, 『소설문예』, 『수필문학』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료 인상에 따른 자사부담액이 큰 부담이었다. 이들 문예지는 경영의 영세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

105)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진흥5개년 계획평가및 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27쪽.

심사과정에서 자사부담율을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sup>106)</sup> 1977년 지원방식이 변경된 직후, 『현대시학』은 자사부담액을 충당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지원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잡지사들은 자체부담액을 의무규정으로 둔 것에 대해 잡지사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문인들은 전반적인 잡지사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문예지만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외의 잡지들은 인상된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해 작가 확보 및 우수한 작품의 게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원고료 지원 문예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잡지들의 원고료는 400~600원선(원고지 1장당)이었는데, 이는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은 8개 문예지의 원고료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sup>107)</sup> 원고료 미지원 문예지는 심한 고료차로 인해 원고청탁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문예진흥원의 원고료지원이 현실화된 요즘 계간문예지 편집자들은 원고청탁에 애를 먹는다고. 고료지원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온 봄호까지는 월간문예지와 고료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소설의 경우 1백장만해도 5만원이상 10만원까지 차이가 생겨 잡지사 스스로 청탁하기 민망하다는 것이다.(중략)월 1백50만원씩의 고료지원을 받는 월간문예지가 종합잡지화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종합잡지에도 지원금이 나가는 마당이고보면 계간지측의 이같은 불만은 이유있는 불만이라는게 문단안팎의 여론이다.<sup>108)</sup>

원고료 지원 문예지의 경우에도 인기 작가들 사이에 경쟁이 커지면서 신인 내지 신진작가들에게 오히려 문호가 좁아질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106) 「문학지는 백60만원까지-원고료지원금 첫 지급」, 『동아일보』 1977년 2월 9일자 5면.

107) 「고료인상...착잡해진 잡지계」, 『동아일보』 1977년 1월 8일자 5면.

108) 「심한 고료차-청탁하기 민망하다」, 『경향신문』 1977년 3월 17일자 5면.

했다. 상업문예지의 경우는, 원고료 인상에 따른 자사부담이 늘어나자 인기도 높은 작가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원고청탁을 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기도 했다.<sup>109)</sup>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1977년 10월 24일에 『문학과 지성』(발행인 정지영), 『세계의 문학』(발행인 박맹호), 『창작과 비평』(발행인 백낙청)은 문예진흥원에 계간지에도 원고료 지원금을 보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급문화를 주도하는 계간지로서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원고료 지불을 관철하여 2백자 원고지 1매당 400~600원의 원고료를 자체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다른 월간 문예지처럼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원고료 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잡지제작에 큰 고충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예지 원고료 지원을 요청했다.<sup>110)</sup>

백낙청은 1975년 원고료 지원이 철회된 것에 대해 “어차피 일방적으로 끊길 지원이었다면 일찍 끊긴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바 있었다.<sup>111)</sup>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공식적으로 원고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당시 원고료 지원금의 인상이 문예지 시장에 가져온 파급효과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경향신문』은 계간지가 원고료 지원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들 3개의 계간지는 고도의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고 문단을 주도해온 객관적 업적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고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영리성이 강한 종합지에도 고료는 아니지만 출판보조비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 속에서 영리와 거리가 먼 순수계간지에 지원이

109) 「아쉬운 형평-고료인상 실시 그 뒤」, 『동아일보』 1977년 3월 10일자 5면.

110) 「원고료보조혜택 요구」, 『매일경제』 1977년 10월 24일자 5면; 「3개 문학계간지 원고료보조 건의」, 『동아일보』 1977년 10월 22일자 5면; 「계간지도 고료지원」, 『경향신문』 1977년 10월 27일자 5면.

111) 신동문·이호철·신경림·염무웅·백낙청, 앞의 글, 18~19쪽.

없는 점은 누가봐도 형평을 잃은 문예진흥정책이다.<sup>112)</sup>

문예진흥원의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1978년에 들어와서 『수필문학』, 『소설문예』에 대한 지원이 철회되었다. 『수필문학』에 대한 문예지 원고료 지원은 1974년부터 지속되어오다 1978년에 들어와 지원이 철회된 것이다. 『소설문예』는 1975년에 창간된 후 문예지 원고료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77년에 발행인이 바뀌면서 체제와 내용에 변화를 주고 지면을 3배이상 늘린 혁신 중간판(11월호)을 발행했다.<sup>113)</sup>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지원철회에 대해서 문예진흥원은 “올해(1978년) 종합문예지 3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문예에 대한 지원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발표했다. 『소설문예』는 1978년 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본지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1978년 1월부터 하등의 이유없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문구를 전면내세운 광고를 싣기도 했다. 당시 이 두 문예지에 대한 지원철회는 “계간지 지원철회와 연결되어 제한된 예산을 구실로 특정 문예지의 편집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었다.<sup>114)</sup>

이처럼 1977년을 기점으로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폭 증가되었지만, 그 지원대상은 더욱 협소해져만 갔다.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의 평가에서도 지원 대상지의 협소화를 지적하면서 대폭적인 확장을 향후과제로 설정하기도 했다.<sup>115)</sup>

지금까지 살펴본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양상은 2단계로 나누어 생각

112) 「계간지도 고료지원」, 『경향신문』 1977년 10월 27일자 5면.

113) 「소설문예 혁신중간판으로」, 『경향신문』 1977년 10월 20일자 5면.

114) 「진흥원 절름발이 문예창작 지원」, 『동아일보』 1978년 1월 23일자 5면.

115)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진흥5개년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66쪽.

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1975년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를 통해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은 친유신체제와 반유신체제라는 비교적 선명한 기준 아래에서 반유신체제 지향성의 계간지에 대한 원고료 지원을 철회하였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선별적 육성’과 배제의 ‘통제·동원’방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1977년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지원방식의 변화로 원고료 지원 문예지와 미지원 문예지 사이의 원고료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문단권력과 연계된 문예지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외의 문예지들은 점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원고료를 지원받는 문예지는 문예지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반면 미지원 문예지는 문예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장질서의 논리와 박정희 정권의 통제논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결국 지원철회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반유신체제 성향의 문예지조차 문예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형평성 없는 지원정책이 자신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인들을 ‘통제·동원’할 수 있었다.

## IV. 맺음말

1968년 안보위기는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인 통제를 강화하며 ‘정신적 근대화’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시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문예중흥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예중흥정책은 1971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71년 대선은 박정희에게 집권연장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선거였다. 김대중이 신민당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과 지식인층은 박정희보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1969년 삼선개헌으로 가시화된 박정희의 장기집권 의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김대중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막아줄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적 지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전시기 박정희 정권의 정책적 관심의 불모지였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1971년 대선유세 때부터 문예중흥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971년 대선 이후부터 문공부를 중심으로 문예중흥정책이 성안되기 시작했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과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973년 10월 19일에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계획의 투자부문은 ‘기반조성’, ‘민족사관정립’, ‘예술진흥’, ‘대중문화창달’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부문은 민족사관정립 부문 중 문화재 관리였다. 하지만 이 부문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국가의 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유신체제기 문예중흥정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투자액 가운데 차지하

는 비율은 적지만 이전시기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반 문화 예술과 대중문화에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1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반(反)박정희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또 유신체제기 지식인의 반유신활동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유신체제성립에 동원되기도 했으나, 또 다른 지식인들은 반유신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문인들은 지식인 반유신활동에 중심에서 있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박정희 정권에게 지식인에 대한 통제의 범주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결국 유신체제기에 추진된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은 박정희 정권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일면 끌어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문화예술인들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제·동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문화예술계의 지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지형은 정치적 활동과 거리가 있었고,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 정권과 일정정도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제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세력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반유신체제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은 문예진흥정책을 추진할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우선원칙이 관철되는 상황에서 문공부가 정부예산만으로 문예진흥정책의 추진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 문제를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문예진흥기금은 극장, 고궁 등 일반 대중문화시설의 입장료에 모금액을 부과하

는 ‘준조세’ 형식이었다. 국민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할 때 반강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의 돈으로 추진되는 문화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내포된 문예중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문예중흥정책 중 예술진흥부문에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는 문예진흥원이었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문공부의 산하기관 격으로 정부의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공부의 관리 아래에서 문예진흥원은 문예진흥기금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선별적 육성과 배제’ 방식을 문화예술인들의 ‘통제·동원’방식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문예중흥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양상은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은 지원을 매개로 한 ‘선별적 육성과 배제’라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통제·동원’방식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예지원고료 지원이 시작되는 1974년에는 문예지원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5년부터 지원이 철회되는 문예지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선별적 육성과 배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예지원고료 지원사업의 ‘선별적 육성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1975년에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를 통해 드러났다. 문예진흥원에서 발표한 계간지에 대한 지원철회의 사유는 계간지의 성격이 동인지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원철회의 실내용은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장파 문인들의 활동이 문

확창작에만 머물지 않고 지식인의 반유신활동에 중요한 자리를 점해왔던 정치적 맥락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예지에 대해 지원을 철회하여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배제’는 친유신체제와 반유신체제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2단계는 1977년에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으로 인한 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지원방식의 변화로 원고료 지원 문예지와 미지원 문예지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문단권력과 연계된 문예지들은 지속적으로 원고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외의 문예지들은 점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원고료를 지원받는 기득권 문예지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미지원 문예지는 문예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지원철회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반유신체제 성향의 문예지조차 문예진흥원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자신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문예지가 놓인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형평성 잃은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보일 수 없었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담긴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국가정책안으로 수용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시장질서의 논리와 국가의 문화예술분야의 통제논리를 결합시켜 유신체제에 친화적인 기득권 문예지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박정희 정권의 문화예술분야의 ‘통제·동원’방식은 정·폐간 혹은 검열을 통한 규제라는 억압적인 성격의 통제보다 더 심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문예지에 대해 ‘배제’와 ‘포섭’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고 미지원 문예지들은 지원여부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통제·동원’ 방식이 유신체제기 문예중흥정책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체제기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성격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문예진흥기금의 모금규정은 2004년에 들어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기금조성의 공공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문예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산하기관 격이었던 문예진흥원의 성격을 민간자율적인 협의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체계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의 메커니즘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아직까지도 문화예술계는 정권의 정치적 목적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면 의례적으로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민간자율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내놓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절차적 민주화가 이룩되고 독재정권시절의 잔재들이 청산되었다고 하는 요즘에도 과거에 자리 잡은 비민주적인 논리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연구를 통해 독재정권의 구습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이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 료

<정부자료>

문화공보부 문화국 진흥과, 「제1차문예중흥5개년계획확정」, 『문예중흥5개년 계획』, BA0136104, 197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성남).

\_\_\_\_\_, 「문예중흥5개년계획에 따른 건의」, 『문예중흥5개년 계획』, 1974, BA013610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_\_\_\_\_, 「문화예술인(문학,출판분야)간담회개최결과보고」, 『문예중흥5개년 계획』, 1974, BA013610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_\_\_\_\_, 「원고료지원문담회의결과보고」, 『문예중흥5개년 계획』, 1974, BA0136107,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_\_\_\_\_, 「문예진흥기금극장모금실태조사결과」, 『문예중흥 5개년 계획』, BA0136107, 1974,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관(성남).

\_\_\_\_\_,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평가」, 『제1차문예중흥 5개년 계획평가및실적』, BA0136111, 197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성남).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제7대편』6, 대한공론사, 1976.

<신문·잡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문예진흥』

<국회회의록>

「제78회 국회 제13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1년 12월 18일)

「제78회 국회 제14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1년 12월 20일)

「제82회 국회 제 3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1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72년 8월 1일)

「제94회 국회 제 1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1975년 9월 30일)

<단체사·회고록>

강진호 외 지음,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문화공보부, 『문화공보30년』, 1979.

채호기 외 지음, 『문학과 지성사 30년 : 1975~2005』, 문학과 지성사, 2005.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편람-한국잡지70년사』, 197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20년사』, 1993.

\_\_\_\_\_, 『문화예술논문선집』1, 1979.

## 2. 연구저서

가람기획 편집부, 『한국현대문학작은사전』, 가람기획, 2000.

강진호 엮음,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하, 한국사전연구소, 2004.

김병익, 『한국 문단사(1908~1970)』, 문학과 지성사, 2001.

문학과비평연구회,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안병욱 외 지음,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오창현,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름, 2001.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2000.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970』IV, 시공사, 2004.

### 3. 연구논문

공제욱, 「일상공간 속의 애국주의」,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 2008.

김문조·박수호, 「한국문화정책:회고와 전망」, 『아세아연구』10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김창남,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역사비평』가을호(통권 32), 역사비평사, 1995.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15,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 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가을호(통권72), 역사비평사, 2005.

송명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구성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

-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 연구』7,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정수진, 「근대국민국가와 문화재창출」, 『한국민속학』46, 한국민속학회, 2007.
-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김정환 외 지음,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6.
- 조현수, 「70년대 한국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1974~1978)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주강현, 「반유신과 문화예술운동」, 안병욱 외 지음,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2005.
-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전통의 선별과 창조」, 『전통과 현대』22, 전통과 현대사, 2002.
- 오명석, 「1960~70년대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4,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역사문제연구』11, 역사문제연구소, 2003.
-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은정태, 「박정희 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15, 역사문제연구소, 2005.
- 이영도, 「기록을 통해 본 70년대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록인』여름호(통권 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9.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옥경, 「70년대 대중문화의 성격」, 역사와 기독교, 『한국사회변동연구』, 민

중사, 1984.

하효숙, 「1970년대 문화정책을 통해 본 근대성의 의미-문예중흥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한수영, 「순수문학이라는 오해」, 『역사용어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홍석률, 「1971년 대통령선거의 양상—근대화 정치의 가능성과 위험성」, 『역사비평』여름호(통권87), 역사비평사, 2009.

# Abstract

## A Study on Raising and Management of the Culture and Art Foundation Fund in the Period of the *Yushin* system

- Focused on the Aid Project for the Money Paid for  
a Manuscript of the Culture and Art Magazine -

Kim, Da-me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conducted by the *Yushin* system. It also analyzes the actual circumstances of controlling and mobilizing the Korean artists through the medium of the Culture & Arts Foundation Fund.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got into stride around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1971. The election was characterized with the presence of *Kim, Dae-Jung* and his being supported by the middle classes and the intelligentsia which was challenging for *Park, Jung-Hee*'s attempt to prolong his term in office. *Park, Jung-Hee*, the 6th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ried to regain the support of the public by suggesting the plan.

The plan were mapped out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as the main body. The bills and organizations were formed to push forward the plan. Finally, in October 1973, the first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for 5 years was officially announced to the public. Even though the fund accounted for a small part of national budget, it was meaningful that the promotion for art and mass culture on the national level was unprecedented by the time.

As the *Yushin* system were formed, some intelligentsia contributed it while the others took part in the anti-*Yushin* system campaign that writers especially were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of the intellectual. The *Park's* administration felt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Korean art society under the category of controlling the Korean intelligentsia. After all, the first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for 5 years during the *Yushin* system implied that the intention of the *Park's* administration to embrace the artists who were critical to it and, at the same time, to control and mobilize them.

The way to control and mobilize the Korean artists was mostly financial support. Moreover, it reflected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society in those days. At that time, the Korean culture and art societ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was those who were pro-*Yushin* system with its vested rights. The second group kept a certain political distance to the government.

The fund to support the Korean artist was raised from the people in the form of quasi-tax and it was launched in the name of the Culture and Art Foundation Fund. The people of Korea had no way to intervene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fund that was literally raised by their payment. The *Park's* administration took advantage of the fund as a political weapon to control and mobilize the Korean artists through 'the

selective promotion and exclusion’.

The Aid Project for a manuscript fe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The mechanism of the project for ‘the selective promotion and exclusion’ was phased over two periods.

During the first phase from 1975 to 1977, the *Park*’s administration relinquished the financial support to the quarterly magazines which nature were potentially anti-*Yushin* system according to the position toward the *Yushin* system. In the next phase, the way to support the aid project was transformed due to the substantial increment of the fund in 1977.

The selective financial support widened the gap between the pro-governmental literary magazines and anti-governmental magazines. It allowed for the group of vested right to build up a solid foundation, on the other hand, those who could not be benefited got excluded in the magazine market. The *Park*’s administration combined a market order theory with regulation of culture and art so that they could control and mobilize Korean artists effectively. Finally, the anti-*Yushin* system magazines had no other way than crying for help to the government to escape the financial predicament.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could almost effortlessly subsume and exclude the anti-governmental magazines with the financial support as a bitter bait.

Consequently, the literary magazines which failed to be benefited were nothing but in ‘a passive position’ to take the governmental decision whether it is supported or not. The excluded group even wanted to take a part in the plan later. Effective ways to control and mobilize the Korean culture and art society on the national position was being operating under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Plan during the *Yushin* system.